

균형발전 반대론자 김문수의 지방공약 못믿어

“국가균형발전은 불가능한 것”

김문수 후보의 과거 발언입니다. 어제 김 후보는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했고 그제 부산에서는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했지만, 사실 김 후보는 오래된 균형발전 반대론자입니다.

“균형발전이란 말은 달콤하지만 실현된 적도 없고 될 수도 없다”, “해괴망측한 균형발전 논리로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균형발전 논리는 균형사망일 뿐이다”

수 년 간 일관되게 쌓여 온 김 후보의 주장들입니다. 2006년에는 아예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문제점’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균형발전에 맞섰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경쟁력을 손상시킨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도 있습니다. 김 후보는 “610년간 서울에 형성된 수도를 억지로 충청도로 옮긴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따라갈까?”라며 정부의 균형발전 노력을 지속적으로 폄훼했습니다.

이제 와 말을 바꿔 지방발전을 외친다 한들 대체 어디서 진정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내란에 사과하는 시늉을 한 것처럼, 표를 목전에 두고 믿을 수 없는 말뒤집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헌법 제123조제2항은 지역균형발전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해 온 김 후보의 선거철 표변을 보며, 헌법정신 파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다가 이제와 엮드리는 내란세력의 생명연장 획책을 봅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입만 열면 빨갱이를 외치시는 분들의 새빨간 거짓말에 결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김 후보의 거짓 균형발전은 없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

(사진 후첨)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문제점



경기도

국민총생산액 2조 3,044억원 감소
수도권 과밀 해소 보다는 오히려 집중 초점!
비밀정책인 획일적 분산정책을 적당하고,
「先 발전 대책, 後 이전 원칙」의 혼수지도로 해야 합니다.

610년간 서울에 형성된 수도권을 억지로 충청도로 옮긴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따라갈까?
가족까지 따라갈까?
대학생들까지 모두 따라갈까?
기업도 따라갈까?

김포공항, 인천공항, 성남공항은 어떻게 하나?
인천항구는 어떻게 하나?
경인선, 경부선, 경춘선, 중앙선, 경전선, 호남선은 어떻게 하나?
서울을 출발점으로 하는 고속도로는 어떻게 하나?

새로 다 만들면 되나?
그 비용은 과연 경제적인가?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문화유적은 어떻게 하나?
역사는 어떻게 하나?

서울올림픽, 서울월드컵의 명성,
세계 모든 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라는 브랜드 가치는 얼마인데!

나눔
공공

2.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폐해

1 국가경쟁력 손상과 수도권 잠재력 상실²⁾

- 글로벌 경제 도래로 수도권의 역량, 잠재력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오히려 집적의 이익을 훼손하는 정책 강행
 - 최대 1만 3천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 및 연관산업 위축 초래
 - 특히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과천(11)과 성남(7)의 경우 효과 극대
 - ※ GDP 중 공공부문 비중('04 기준): 과천 43.5%/5,920억, 성남 6.3%/4,820억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내 총생산은 연 2조 4천억원 감소³⁾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완료되면 지역간 형평성이 약간 개선되지만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2조 4,000억원 감소
- 부분적으로 형평성을 개선하고 지역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 즉 수도권의 경제둔화와 자원 배분 왜곡 등이 더 큰 것으로 분석

▶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연간 9조 3,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정부의 정밀한 전망과는 큰 차이가 있음

※ 공공기관 이전 관련 주요 연구자료 - 부록3

- 북부지역은 수도권 과밀과도 관계없고 낙후지역임에도, 이 지역 소재 공공기관마저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하고 있어 균형발전이라는 이전논리와도 모순

• 이전하는 기관 : 5개 기관, 인원 800여 명, 지방세 납부 1억 5천3백만원 수준
※ 국방대학교(400명), 중앙119구조대(49명),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173명), 교통개발연구원(93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40명)

* 경기개발연구원(2005),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 부산시, 강원대수-한국경제연구원 조갑환 연구원 공표(2008)

06.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문제점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야 하나?
대통령 말씀대로, 건설경기를 일으키기 위하여?
지난 대선때 재미 좀 봤으니까? 계속 재미보기 위하여?

생각할수록 황당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고 있을 때인가?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지배세력의 교체가 안 되기 때문인가?

아! 슬프다! 대한민국이여!
어찌 이런 일이? (2004.7.28)



68/69